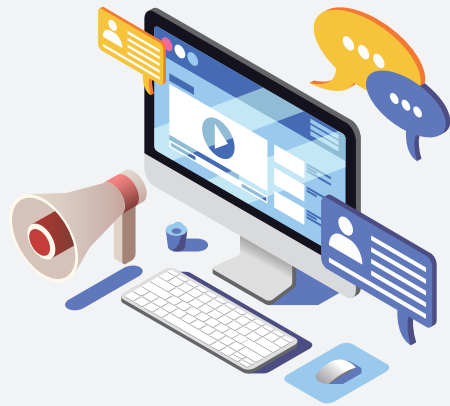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22. 12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kakao!impact



kakao

비매품 | 무료



ISBN 979-11-979222-5-1



kakao!impact



kakao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22.12

최종보고서



# 제출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최원기(티랩)

공동연구원 : 노명순(고려대학교)

조민식(서정대학교)

## 목차

1.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6
3) 연구방법	7
2.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논의	9
1) 시민성 연구와 개념 변천 : 시민권에서 시민성으로	9
2) 시민성 개념의 철학적 토대	27
3) 디지털 시민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	28
4) 유사 개념	39
5)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45
3. 디지털 시민성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49
4. 기존 척도에 대한 적용	55
5.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3

## 표목차

〈표1〉 시민사회관 비교: 홉스, 로크, 루소 .....	24
〈표2〉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 .....	26
〈표3〉 공화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의 시민성 비교 .....	28
〈표4〉 유네스코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과 하위 역량의 개념 .....	35
〈표4〉 전통적 시민과 디지털 시민의 특성 .....	29
〈표6〉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	38
〈표7〉 디지털 시민성과 유사개념 간의 관계 .....	44
〈표8〉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 .....	45
〈표9〉 디지털 시민성 개념과 특징 .....	51
〈표10〉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제점 .....	53
〈표11〉 디지털 시민성 자질 .....	54
〈표12〉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7대 주제 .....	55
〈표13〉 임영식 7대 척도 재구조화 .....	56
〈표14〉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척도 조정 .....	58

## 그림목차

[그림1] 디지털 시민성의 속성 .....	31
[그림2]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 시민성 강조점의 변화 .....	32
[그림3] 디지털 시민성 개념도 .....	33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 1) 연구목적

지금까지 시민성 개념은 공화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Bart van Steenberger, 2004). 그러나 시민성 개념 자체는 변화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또는 공동체 위에서 성립하고 있어서 시대변화에 따른 공동체 특성의 변화에 맞춰 시민성 개념도 변화해 왔다.

동서 갈등 종식이 이루어진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성 개념은 세계 시민성 개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Meyer, 2010), 2007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및 일상의 온라인화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 혁신을 거치면서 시민성 개념은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사회가 오프라인 사회 영역을 능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민성 개념이 오히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민성을 배재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민성 개념 또한 기존의 시민성 개념과 동일하게 그 출발점이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개념 간 차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 두 개념은 각 개념이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별된다.

시민성 개념의 주체인 현실 속의 개인은 때론 자의적으로, 때론 타의에 의해 가족, 직장, 국가 등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고정된 ID와 이에 따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주체인 온라인상의 개인은 철저히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특정 집단에 들어가거나 나오기도 하며, 심지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ID마저 필요에 따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가변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전통적 시민성 개념에 부가하여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보편적 차원에서 확산 추세에 있지만, 현실은 디지털 세상의 변화 속도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의 행위는 법과 규범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인 시민성 개념도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위는 일부 범죄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은 가상이라는 특성을 면책 삼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3D 가상세계 제페토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실 법은 이를 준용할 법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sup>1)</sup>.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조차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영역 또한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성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확립하고 구성원 스스로 그 규범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제에서는 공화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통적 시민성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 시민성이, 전 세계가 하나의 가치

1) “벗어봐” 초등생들 가상현실서 아바타 성희롱(조선일보. 2021.4.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2/4V4AP75Z5FGAVCTRJ33EOQBFI/](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2/4V4AP75Z5FGAVCTRJ33EOQBFI/)

로 대변되는 시대에는 세계 시민성이 그러했듯이, 온라인 영역이 보편적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최근의 시대성 속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이 모두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푸른나무재단이 2018년도 시행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디지털 에티켓, 감정 인지, 안전과 보안,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저작권, 공감, 온라인 정체성, 사이버폭력 대처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도출된 척도는 매순간 급격히 변하고 있는 온라인 기술의 발전 및 변화 정도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문제로 인한 온라인 사용률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9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은 9.6%로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0대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된 가상공간 중 하나인 제페토는 전 세계 이용자만 2억명인데, 이 중 10%인 약 2천만 명이 국내 이용자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0대라는 보도도 있다<sup>2)</sup>.

이런 측면을 볼 때 상기 연구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시

2) 네이버Z가 운영하는 제페토 2000만명 이용, 대부분 10대 (조선일보.2021.4.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2/4V4AP75Z5FGAVCTRJ33EOGQBFI/](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22/4V4AP75Z5FGAVCTRJ33EOGQBFI/)

대변화를 고려한 재검토는 시급하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의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지켜져야 할 시민성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디지털 시민성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및 사용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에 일치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내용은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다.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고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의 영역에 대해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세계의 최근 변화 특성,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 디지털 세계에서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특성, 디지털 영역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성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도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철학적 차원의 논의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기

---

반으로 성립된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성 개념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해 기존 연구와 오늘날의 시대성을 바탕으로 재정의 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시민성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종단적 고찰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횡단적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성 개념에 대한 다학문적 기존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민성 개념의 변화 단계별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조작적 개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디지털 세계의 최근 변화 특성,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 온라인 세계에서 청소년의 인간관계 특성, 디지털 영역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정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1) 시민성 연구와 개념 변천 : 시민권에서 시민성으로

### 가. 시민(citizen)

도시를 의미하는 라틴어 civitas에서 유래한 시민(citizen)은 어원상으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지위이다. 오늘날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적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시민 개념의 시작은 고대 도시 국가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행정단위를 넘어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의 공공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이때 시민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나 국가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였다. 시민 신분은 토지 소유자와 전사(戰士)로 구성된 귀족 계급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신분 제도하에서 시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근대 시민의 뿌리가 되는 이념과 관행이 탄생했다. 그리스 시민은 소수의 통치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자신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한다는 이념을 탄생시켰다. 폴리스의 근본 규범은 모든 시민이 폴리스의 동등한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폴리스 시민이 발전시킨 정치적 이상은 이후 근대 시기에 ‘모든 인간’에게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씨앗이 되었다(신진욱, 2008).

고대 로마에서는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이 탄생하였다. 로마법은 주권자로 ‘로마 시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투표권과 공무 부담권이 부여된 사람들이로서 영토 내의 모든 거주민을 포괄하는 단어는 아니었다. 이후 로마제국이 수립되고 3세기쯤에는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민족의 일부 구성원에게도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는 중세에는 고대의 정치적 시민 개념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당시 보편화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 지배권이 아닌 천부 인권으로서 시민권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든다.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한 신의 자녀라는 생각은, 그리스-로마의 시민 개념이 갖고 있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한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더 이상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신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라틴어가 아닌 각 민족어로 번역된 성서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며 자기 자신을 신의 평등한 시민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중세에는 상인과 수공업자의 길드를 중심으로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봉건적 질서를 대체할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하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국민의회가 선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 법적·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과 시민(또는 공민)을 구분하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 즉 하나의 국가적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특정한 신분 집단의 법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그 신분 집단은 당시 프랑스에서 ‘제3신분’이라 불리던 세력이다. 제3신분은 성직자와 귀족, 왕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 집단을



지칭하는데 농민, 노동자, 수공업자, 부르주아 등이 포함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시민, 즉 구체제하에서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당했던 부르주아와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선포한 것이다(신진욱, 200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노예, 상인, 농민, 여성 등 피지배 집단은 시민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오랜 투쟁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 집단이 시민 계급의 핵심으로 확대되면서 ‘시민’은 ‘인간’으로 보편화되었다.

#### 나. 시민권(citizenship)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citizenship)이라고 한다. 시민권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로마시대에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로 보았다. 오늘날 시민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함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오늘날 시민권은 권리·의무에 관한 개념으로, 공동체 내지는 정치조직에서 시민은 시민권을 전제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7세기, 18세기의 서양국가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매개로 인간의 자연권 또는 인권의 보장이 헌법이나 권리장전, 인권 선언에 있어서 선양되었다. 시민권이란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 국민의 개별적 여러 권리의 총칭이다.

개방적 보편적 의미에서의 시민권 개념이 사용된 것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써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시민권은 자연권에 대립하는 시민적 권리, 즉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또한 시민권은 특정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무리 인권을 강조해도 실제 정치생활에서 시민권의 보장 없이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공동체<sup>3)</sup>에 반드시 속해야 함을 강조한다(Arendt, 1951). 이처럼 시민권은, 인간은 누구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간의 조건이다(김만권, 2014).

#### 다. 시민권의 역사

근대국가 내에서 필수적인 삶의 조건으로 자리잡은 시민권은 폭넓게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마샬(Marshall, 1992: 8)은 시민권을 “사회의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기준에 따라 문명인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마샬의 분석에 의하면 시민권은 서양국가에 있어서 17세기 이후 시민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실현되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Marshall, 1950).

- 18세기, 자유권, 공민으로서의 시민권(civil citizenship) : 법 앞에서의 평

3) 이런 정치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권리를 가질 권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Arendt, 1951).

- 등, 개인적 자유,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재산소유와 계약체결의 자유
- 19세기, 참정권,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 : 선거권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 20세기, 사회권,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 :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를 향유하는 완전고용에의 참여 권리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사적 소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형태로 자유권이 확대되었다. 자유적 시민권은 근대적 사회계약론의 기초가 된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대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와 일치한다.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상과 양심,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인신과 재산의 자유 등으로 17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 말에 이르러 정착된 개념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권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이 통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정권이 확립되었다. 보통선거권의 형성과 확립에 따라 성장한 정치적 시민권은 정치공동체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공적 영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19세기에 제기되어 20세기에 보편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 개선의 추구를 통하여 요청되어 20세기에 들어 입헌주의의 틀 속에서 보장되었다. 사회적 시민권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세기에 제기되어 발전된 민주주의에서 정착된 권리이다. 이상의 3가지 권리 모두 안정된 민주주의 정체에서는 일반화된 권리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글로벌화의 배경하에 국적에 의거한 시민권이 아니라 국적과 분리된 시민권의 방향으로 재외국민에게도 ‘단계적 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창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형식적 시민권에 대한 보완으로서 실질적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글로벌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 2020.9.8).

시민권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선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논의된 시민권의 맥락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은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정회원에게 부여되는 지위이며, 지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지위에 의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권(citizenship)은 민주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는 시민권이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수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위한 참여로 귀결된다. 이러한 시민권 개념은 국가와 시민 간의 주고받는 관계를 보장하고 참여를 통해 시민이 확보한 권리를 준수하는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여 완전한 삶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민은 이러한 권리가 단순히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권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조직, 참여, 책임 및 개입 과정을 기반으로 맥락적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김영현, 2021).

마살의 시민권 개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면에서 이미 ‘배제’의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시민권’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용인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적

차이는 해소될 것이라고 본 마셜식 믿음은 1970년대 이후 서양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잃었고 이는 시민권 자체에 대한 다층적 물음을 야기하였다(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21).

시민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권 개념 자체가 보편적 원리들, 즉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들의 공동체를 이상적 형태로라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처럼 근대적 시민권의 형성을 선언한 문서에 혁명, 봉기, 저항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시민권을 끊임 없이 재구축할 수 있는 문제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21).

한편, 시민권을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국가가 탄생하는 데 있어 핵심 개념이 ‘사회계약’이다.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의 개인이 자연권을 양도하여 계약에 의해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은 근대의 태동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발전해 왔고, 특히 정치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구도는, 공통된 정치권력이 없는 자연상태에 있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자연인이 극심한 혼란과 투쟁의 상태(전쟁상태)에 봉착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정치적 권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시민상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조공호·강정인, 2012).

사회계약론은 서양의 중세질서를 뒤흔들고 근대적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조형한 일련의 혁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타고난 신분을 위주로 구성된 중세사

회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바로 ‘사회계약’이 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인간 삶의 중심축이 신권이나 이를 등에 업은 왕권으로부터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으로 옮겨진다.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개인주의는 영국의 정치혁명(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경제혁명(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시민 세력과 맞물리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이성중심주의를 인간과 사회의 제반 현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 태도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서구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성중심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17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태동한다(조공호·강정인, 2012).

자유주의는 개인을 욕망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을 삶의 과정에서 개인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추고 있는 존재라고 본다. 신의 의지나 궁극적 선의 실현보다는 개인적 욕구와 이익의 추구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동인이며, 인간은 이러한 개인적 욕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존재라고 본다(조공호·강정인, 2012).

그러나 이러한 자기이익의 무제한적인 추구는 필연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이익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데,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무제한적인 자기이익추구의 자유를 억제하는 권리의 상호 동등한 유보와 양도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조공호·강정인, 2012).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유보와 양도를 위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협약은 인간이 갖추고 있는 합리적 계산능력인 이성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곧, 이성의

주체인 개인들 사이에 맺게 되는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구제하고, 그럼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조공호·강정인, 2012).

17~18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계약이 국가형성의 이론적 기초라는 주장을 제시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국가론이나 중세 후기 절대군주론자의 왕권신수설에 대비되는 근대적 정치철학을 정립하였다. 초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사회계약론의 기본구조는 홉스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정념(passion)으로 가득 찬 자연상태의 인간이 합리성의 결과인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한다는 홉스의 사고는 17세기 유럽의 정치사상은 물론 향후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새로운 정치이론의 출발점이었다(김병곤, 2007). 홉스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론은 같은 17세기 영국의 로크와 18세기 프랑스의 루소 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계약은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개념이다. 홉스, 로크, 루소 등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며, 협약(pacts), 협정(compact), 약정(conventions), 신의계약(covenants)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발달시켜 왔다.

사회계약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모여 계약을 맺고 자신의 권리(자연권)을 양도해 국가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은 이성적인 인간이어야 한다. 자연상태를 벗어나 국가를 설립하겠다는 이성적인 의지와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성적인 인간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 양도에 동의하는 것이 국가 창설의 가장 강력한 정당성이다(전주희 외, 2018).

자기보전과 자기이익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이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안은,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혼란을 제거하고 각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가지는 국가를 형성하기로 하는 사회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이 누리고 있던 자연권(홉스), 자연법 집행권(로크),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힘(루소)을 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공동체, 곧 국가에 상호 동등하게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공호·강정인, 2012).

홉스, 로크, 루소가 공동체에 양도하는 내용을 다르게 개념화하는 것은 삼자가 평화를 깨뜨리고 개인 간에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달리 보기 때문이다(조공호·강정인, 2012).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갖는 자기보존과 자기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권리인 자연권이 혼란의 주범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권의 상호 동등한 양도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 로크는 자연법의 규제를 받는 자유로운 자기이익추구의 권리, 곧 자연권이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 아니라, 이성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하고 그로부터 받은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하는 자연법 집행권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근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로크는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를 사회계약의 내용으로 강조한다. 이에 비해 루소는 각자가 자연상태에서 갖는 자기인식과 이를 통해 얻은 소유물 및 이에 관한 권리가 혼란과 갈등의 원천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이를 전적으로 양도하고 오로지 공동이익만을 추구하기로, 곧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고 본다.

### - 홉스 -

홉스에 따르면 근대국가 혹은 시민사회를 벗어난 상태가 자연상태이다. 이런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에 처한다. 홉스의 이런 생각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홉스는 자연이 누구에게나 자기보존의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본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제한 없는 자유와 평등을 갖고 태어난다. 이러한 자연권을 가진 인간은 자기보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이기적인 싸움을 지속하게 되어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한다(전주희 외, 2018).

그래서 홉스는 무제한의 평등과 자유를 포기하고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자고 설득한다. 새로운 국가는 시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국가는 안전하게 자기보존의 욕망을 실현해줄 절대권력으로 등장하고 동시에 시민의 동의를 기초로 한 공통의 권력으로 나타난다. 홉스는 이를 위해 사회계약을 맺자고 제안한다. 이것이 17세기 새로운 국가 설립의 아이디어로 각광받은 ‘사회계약론’이다(전주희 외, 2018).

이런 홉스의 관점을 시민과 연결지어 보면, 시민의 존재는 절대권력의 수립과 운영을 전제로 한다.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교류가 이루어져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상태라면(civilized), 그 핵심적 요소들이 공권력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기정, 2018).

홉스가 말하는 자유는 ‘주권자가 시민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불문에 부친 일에 대하여만 존재’한다. 법이 침묵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 가령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의 자유, 혹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을 택할 자유, 자녀를 자기 뜻에 따라 교육할 자유 등이 홉스가 말하는 자유의 범위이다. 법이라는 강제력이 없는 곳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홉스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전주희 외, 2018).

- 로크 -

로크는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자연권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향유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각자가 이러한 자연권을 무제한으로 추구하여 자연법을 위반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자연 상태에서 각자는 이러한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하고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곧 자연법 집행권을 갖는다는 것이 로크의 견해이다. 이러한 자연법 집행권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므로, 이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재산권'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핵심이라고 로크는 보고 있다(조공호·강정인, 2012).

로크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적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갈등을 판단하는 권위자가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향유하기가 불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는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에 의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기정, 2018).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이성의 규율로서,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재산권, 곧 자연권을 추구하는 데 설정된 한계로서 작용한다. 즉 이는 각자의 재산권 추구의 합리적인 테두리를 설정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게 될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자연법 집행권의 포기과 양도도 결국은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미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표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도 인간이 본유하고 있는 이성의 능력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조공호·강정인, 2012).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이러한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의견이다. 오직 이것만이 사회계약과 이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공호·강정인, 2012).

### - 루소 -

루소는 인민(people)을 노예와 대비시킨다. 그렇다고 인민이 곧 시민은 아닌데, 인민은 어떤 결합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노예가 될 수도, 근대적인 정치 주체로서 인민(/시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란 계약임과 동시에 연합의 생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민이 인민이 된다는 것은 동어반복이 아니다. 인민은 자연적으로 생겨 무질서하게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다. 루소에 따르면 인민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 인민이 된다. 따라서 ‘대중 혹은 무리는 어떻게 정치적 주체인 인민이 되는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전주희 외, 2018).

그런데 인민은 왕이나 신이라는 외부적 힘으로부터 부여되는 자격도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도 아니다. 따라서 인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민 스스로가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 연합의 생산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계약에 앞선 계약이며, 모든 계약에 앞서는 단 한번의 계약이다. 이는 이후에 올 모든 계약과 협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선행적 조건으로서의 계약이 된다(전주희 외, 2018).

루소는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 즉 인간이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이 자연권으로 보장받은 자유를

양도하지 않은 채 결합하는 연합의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다. 인민이 주체가 되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통해 비로소 ‘인민’이라는 주체가 형성된다. 그 때문에 인민은 홉스의 모델처럼 계약을 통과하면서 개인으로 해체되지 않는다. 홉스의 계약을 통과하면 대중은 ‘원자화된 개인’ 혹은 개별화된 개인으로 남게 된다. 반면 루소에게는 ‘인민’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남는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며 무리도 아니다.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이자 국민이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인데, 능동적일 땐 주권자로, 국가의 법에 종속되어 복종의 의무를 수행할 때는 신민이 되는 주체이다(전주희 외, 2018).

이를 위해 루소는 계약이라는 법적인 모델을 차용하지만 전혀 다른 계약 모델을 제시한다. 루소의 계약모델은 일대일의 계약, 상호적 계약이 아니다. 루소는 ‘전면적 양도’에 의한 사회계약을 제시한다. 루소는 양도 불가능한 계약의 형식을 고안한다. 사회계약의 단 한 번의 만장일치로 전면적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상호적 교환이 아닌 한에서 가능하다(전주희 외, 2018).

어떻게 전면적 양도가 양도 이후에도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전체 인민은 계약의 한쪽 편에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자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준다. 그러나 계약의 다른 편은 누구인가?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무엇인가? 연합, 즉 개인들과 그들의 ‘힘’의 결합이다. 이 연합 혹은 공동체는 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약의 산물이다. 여기에 사회계약론의 역설이 있다(전주희 외, 2018).

루소의 고민은 지배-예속의 회로를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자유가 노예적 예속으로 대체되는 고리를 끊으려 한 것이었다. 사회계약의 모든 의도는 여기에 집중된다. ‘양도 불가능한 양도’라는 묘안은 권리를 내주는 것 대신 모두의 평등이라

는 조건을 창출한다. 그것은 누구도 자기를 양도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이로부터 ‘집합적인 인민’ 혹은 ‘연합’이 탄생한다. 집합적인 인민은 ‘공동의 자아’로서 공적 인격을 획득하며, 이는 곧 수동적으로는 ‘국가’, 능동적으로는 ‘주권자’로 명명한다(전주희 외, 2018).

루소의 사회계약은 완전한 양도로 수립되는데, 이때 개인이 양도한 것은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재구성한다. 즉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로, 자연적 평등은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으로 되 돌아온다(전주희 외, 2018).

홉스의 전쟁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서로 평등한 힘의 관계로서 마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즉 이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배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항구적인 전쟁이다. 하지만 루소에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로서 대면하는 전쟁상태는 사회상태의 개시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커지는 때이다. 평등해서가 아니라 평등의 파괴가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루소가 말하는 전쟁상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즉 계급 갈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사회의 불평등과 지배와 예속 관계의 근본 원인이다(이기정, 2018).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사회의 기원에 불평등의 문제를 사유하는 것이었다면 『사회계약론』은 인간을 시민으로 만드는 조건에 전략을 제시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생존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힘’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는 힘의 방향을 틀어 결합의 방식을 창안하는 것이다. 전면적 양도를 통한 ‘연합’이다(이기정, 2018).

이상과 같이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의 구성원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원천, 곧 자기이익추구의 무제한적인 권리인 자연권이나 자연법 집행권 또는 개인의 인신이나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이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힘을 계약의 결과 설립되는 공동체에 상호 동등하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통해,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이익의 보장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또한 이런 사회계약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근원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도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이다(조공호·강정인, 2012).

세 명의 사회계약론자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이기정(2018)은 시민사회의 성립 경로, 형성 조건, 성격, 기능, 평가,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으로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1> 시민사회관 비교: 홉스, 로크, 루소

	과정별	로크	루소
성립 경로	자연상태→국가→시민사회	자연상태→시민사회·국가	자연상태→시민사회→국가
형성 조건	주권자→안정·질서	공권력→상급 판단자	우발성, 우연성
성격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	사적+공적 영역	사적 영역
기능	사생활 돌보기 매우 제한된 이의제기	사생활 돌보기 활발한 감시·비판·견제	인간소외와 노예화 전개
평가	주권자의 권력이 낡은 결실로 시민이 향유	공권력에 의해 출산, 자율성 형성하는 자식	공권력이 구제해야 할 보편적 타락 상태
정부의 입장	날아 지켜야 할 자식 최선의 육성책은 방목	상호 시정·보완관계 갈등 시 시민사회 우위	시민사회의 전반적 타락으로부터 구원

출처: 이기정(2018)

사회계약론자들은 인간을 자유의 주체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성을 띠고 있다. 즉 구성원 모

두의 자발적인 동의만이 사회계약 그 자체와 이에 의해 설립되는 국가권력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본다. 근대국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자유로운 개인, 권리 주장이 가능한 시민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라. 시민성(citizenship)

영어 단어 citizenship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시민권과 시민성으로 사용된다. 동일한 영어 단어에 대해 우리말 사전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 시민권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성은 시민의 자질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이준웅(2009)은 시민성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능력과 덕성), 조건 및 자격(멤버십)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어떤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수(2017)는 시민, 시민권, 시민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시민 :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성을 발휘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
- 시민권 : 시민됨의 자격과 소속 및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출처인 법적 지위와 제도적 장치
- 시민성 : 시민의 자질과 덕성, 시민행동과 시민의식에 관한 것

근대 이후 시민의 시민권과 시민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

요한 시민성의 함양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시민권’을 지닌 개인들이 ‘시민성’을 구현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이동수, 2017).

이처럼 ‘시민성’은 시민적인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시민의식’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나 성향 외에도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외면적 행위나 능력, 자질 등을 주된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KERIS, 2017).

폭넓은 의미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시민성을 개념화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자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가 연구되어 왔으며, 관련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

학자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Newmann (1977)	대화 능력, 자료 처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논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협동력
Engle & Ochoa (1988)	기본적인 지식,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신념, 기본적인 지적 기능(문제 평가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올바른 판단 능력 등), 정치적 기능(투표, 사회참여 등)
Butt(1988)	의무 덕목(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심) 권리 덕목(자유, 다양성, 사생활, 공정한 절차, 소유권, 인권)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 (NCSS) (1989)	정의, 평등, 책임, 준법, 자유, 정직, 타인에 대한 배려, 충성
한국교육개발원 (1994)	인간의 존엄성, 기본 질서, 자유(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김용신(2006)	자유주의 시민성(자율성, 경쟁의식, 비판의식) 공동체주의 시민성(공공의식) 구성주의 시민성(타협성, 상호성)



정호범(2006)	바람직한 삶의 영위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준법정신, 협동정신, 바람직한 정치참여 능력
강대현(2007)	지식(합리성, 정의, 참여, 배려), 기능(합리성, 정의, 참여, 배려), 가치·태도(합리성, 정의, 참여, 배려, 관용, 연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2018)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출처: 이서윤(2020: 21)

## 2) 시민성 개념의 철학적 토대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시민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개념화되어 왔다(이진석, 2018). 오늘날 시민은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구성원’(공화주의적 전통)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적인 개인’(자유주의적 전통)을 뜻하기도 한다(주선미, 2010). 시민의 의미에 따라 시민성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시민성은 공직, 책임, 의무, 부담 등으로 표현되고,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주로 지위, 권한, 권리 등으로 표현된다(허수미, 2010).

또한 Abowitz와 Harnish(2006)는 근대 시민성 개념이 시민공화주의적(civic republican) 관점과 자유주의적(liberal) 관점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시민공화주의적 관점은 투표와 정부를 위한 봉사 활동과 같은 정부에 대한 협조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자유·평등과 같은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최문선·박형준, 2015). 즉,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의 의무나 자질 측면을,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이 갖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표3〉 공화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의 시민성 비교

비교요소 \ 관점	공화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시민성을 표현하는 용어	공직, 책임, 의무, 부담	지위, 권한, 권리
내용 요소	지역 및 국가사회를 포함하는 정치 집단에 대한 정치적 참여, 투표 및 정부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의 정부에 대한 협조적 참여	개인의 자유, 평등과 같은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
강조점	시민의 의무나 자질	시민의 권리

출처: 이서윤(2020)

### 3) 디지털 시민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 일반인은 물론 학자 간에도 일치된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디지털 삶이 확장·심화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삶의 양상으로 통합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연구자의 학문적 기반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 디지털 시민

Bennett(2008)에 따르면 오늘날 시민은 전통적 정치참여와 선 중심의 시민에서 생활양식이나 환경의 질과 같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시민은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민을 역동적 시민(actualizing citizen)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특성을 <표4>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박기범, 2014).

〈표4〉 전통적 시민과 디지털 시민의 특성

전통적 시민: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	디지털 시민: 역동적 시민(actualizing citizen)
- 정부 참여에 대한 강한 책임감	- 정부 참여에 대한 약한 책임감
-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행동	- 생활정치 중심 - 정치적 소비주의, 자발적, 사회적 행동
- 지도자와 미디어에 대한 높은 신뢰 - 뉴스를 통해 이슈와 정부에 대해 정보 접촉	- 미디어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 뉴스를 통한 정치적 추종 거부
- 사회조직, 이익단체, 정당에 가입 -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 사회적 행동을 위해 느슨한 관계망에 가입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출처: Bennet et al(2008), 박기범(2014)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인 시민은 선거나 정당 참여에 대한 의무감은 약하지만,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나 네트워크에 기반한 양방향적 소통과 참여에는 관심을 갖는다. 박기범(2014)은 이를 책임감과 도덕성은 약화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통과 협업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성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규범적 실천성은 약화되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실천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2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기반으로 시민성(citizenship)으로 재해석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의 요소와 구조를 새로이 추가하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Pajnik, 2005; 김영현, 2021). 이런 연구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시민성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 또는 스마트 기기로 대표

되는 쌍방향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수행하기 어려운지 탐색한다. 기존 시민성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점을 포착하고 적합한 요소와 구조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주로 연구대상을 성인이나 대학생으로 설정한다(김아미 외, 2019; 박기범, 2014; 안정임 외, 2013; Bennett 외, 2008; Choi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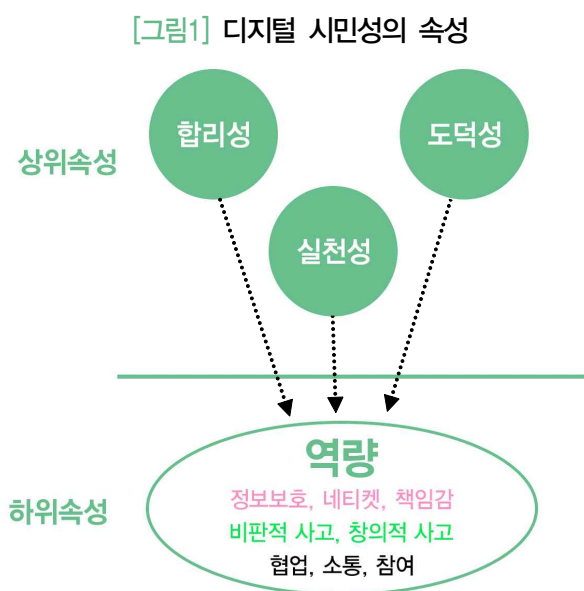
둘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삶에서 이미 디지털 시민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시민성의 방향과 역량을 탐구하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 이런 연구에서는 주로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을 제안하고,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역량)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정의하고 있다(Ribble, 2004; 김영현, 2021). 디지털 시민성을 역량(competency)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시민성을 교육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자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사이버 중독, 가짜뉴스의 범람 등과 같은 디지털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양은 외, 2019; 임영식 외, 2019; 정제영, 2018; 한유경, 2018; Ribble, 2015; ISTE, 2016; UNESCO, 2019).

#### 다. 전통적 시민성의 확장으로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

미국의 'Common on sense Media' 저널(2009)은 디지털 시민성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시민이 구성한 내용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시민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의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능력과 윤리적 기반을 습득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디지털 능력이란 ICT 소양 능력과 활용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ICT 능력은 도덕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기범(2014)은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성으로 보며, 디지털 시민성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로 분석틀을 추출하고 전통적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을 비교하였다. 그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2개로 나누었는데, 시민성의 고유한 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위 속성을 따져 보는 연구와, 디지털 세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역량을 다루는 하위 속성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시민성은 합리성과 실천성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도덕성 영역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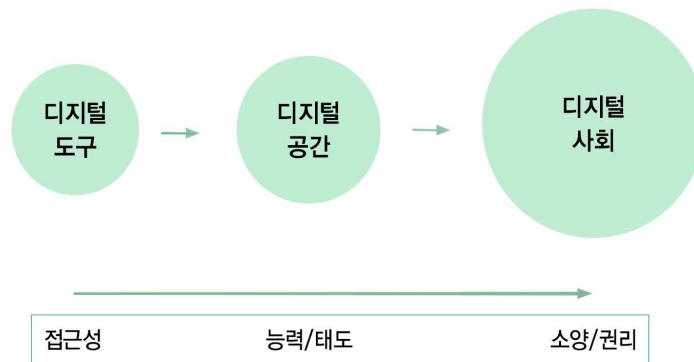
출처: 박기범(2014)

박기범(2019)은 후속 연구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결과 디지털 공감력,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는 유연

한 사고가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시민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혼합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추출하였다.

김아미 외(2019)는 ‘디지털’의 의미가 테크놀로지의 발달, 사회의 변화 및 미디어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도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교집합이 있는 개념으로, 디지털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그 교집합이 확장되고 있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 시민성의 강조점의 변화는 [그림2]와 같은데, 디지털 시민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맥락, 기술적 맥락, 디지털 시민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이벤트로 인해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게 되나,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영역과 내용이 있고,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영역과 내용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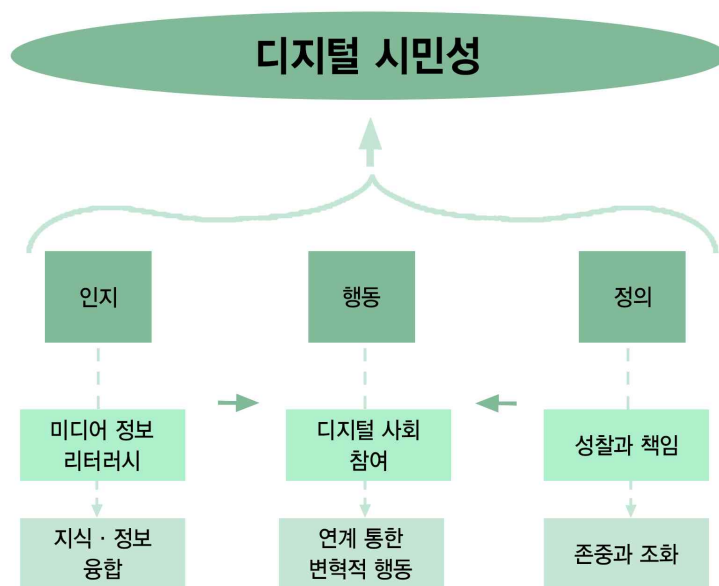
[그림2]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 시민성 강조점의 변화



출처: 김아미 외(2019)

김아미 외(2019)는 현재 디지털 시민성의 영역과 영역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그림3]과 같이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3] 디지털 시민성 개념도



출처: 김아미 외(2019)

첫째, 인지적 영역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로서의 지식과 기능, 지식·정보의 연결과 융합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정의적 영역은 디지털 성찰과 책임, 디지털 갈등에 대한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행동적 영역은 다양한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 참여, 디지털 연계를 통한 변혁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아미 외(2019)의 연구에서 강조점은 디지털 시민성이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며, 이때 디지털 시민성을 드러내는 행동은 반드시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뒷받침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현(2021)은 전통적 시민성으로부터 디지털 시민성으로의 변화 흐름을 역

사적으로 탐색한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성은 ‘참여’에서 기존 시민성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법연(2021)은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시민역량으로 칭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특성,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 현행 디지털 시민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성이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젝트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한다.

#### 라. 길러야 할 역량으로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참여성, 관여성, 공공성으로 나누고, 이 하위요인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미디어 교육 경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였다.

최문선·박형준(2015)은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이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적 인터넷 활용 능력, 비판적 관점,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UNESCO(2017)는 「교육 2030 아젠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습득과 기술 습득을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들이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표4〉 유네스코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과 하위 역량의 개념

역량	하위 역량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환경에서 IC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책임감 있게 관리·운영하여 데이터, 정보, 콘텐츠에 접근·검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안전 및 회복력	개인정보 보호	자신과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 장치 보안, 개인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전략을 구현하는 능력
디지털 참여	정보공유 및 상호작용	상호작용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유 목표(일, SNS 활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를 달성하는 능력
	사회참여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역·글로벌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과 의지
	사이버 에티켓 (네티켓)	서로 다른 청중과 서로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참여할 때 선택 사항을 알리기 위해 윤리적이고 정중한 행동을 보여주는 능력
디지털 정서지능	자기인식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기분, 감정, 추진력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능력
	동기부여	디지털 영역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도권, 헌신을 입증하는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긍정적인 온라인 관계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공감	디지털 상호작용 중에 다른 사람의 감정, 필요 및 우려에 대한 인식과 연민을 나타내는 능력
디지털 창의성 및 혁신	창의적 문해력	기술을 적용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조정/규레이팅하는 능력
	표현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의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출처: UNESCO(2017, 2019)

있는 역량'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제시하고 있다. UNESCO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시민성은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민성과 구분된다.

UNESCO(2019)는 성인에 비해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상황에 취약한 초·중학생에게 디지털 시민성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함께 디지털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UNESCO 방콕은 DKAP(Digital Kids Asia-Pacific)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안전 및 회복력, 디지털 참여, 디지털 정서지능, 디지털 창의성 및 혁신 등 5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정제영(2019)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편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함께 디지털 환경이 가져오는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를 통한 개인 간 정중한 소통 규범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디지털 시민성 척도에 대해 연구한 임영식·정경은(201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8대 영역 -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저작권, 안전과 보안, 온라인 정체성, 사이버 폭력 대처, 감정인지, 공감 -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는 다시 7대 영역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행 전 사전평가와 프로그램 수행 후 사후평가

가 시행되었다(임영식 외, 2020). 이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검증되었지만, 동시에 가변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현장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과 척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김양은 외(2019)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개인별, 생애주기별 필요한 역량의 차이는 있으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지식, 가치,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연구자는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야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보며, 디지털 시민성을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일,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전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다루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사 개념과의 관계, 시민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연구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강조점이나 지향이 달라진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객관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상의 특성 자체가 급격한 가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표6〉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학자	디지털 시민성
Ribble & Bailey(2004)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행위의 규범
ISTE(2007)	디지털 세계에서 법적·윤리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행동하고 따르며 자신의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평판을 관리하고 온라인 내 사회적인 상호 작용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기술에 대해 아는 역량을 갖추는 것
Nossberger (2008)	인터넷을 정기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Common on sense Media (2009)	디지털 세계에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그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삶의 주인이 되는 것
Ribble(2011)	기술의 사용에 관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의 표준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SN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활동하며, 공익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
박기범(2014)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성
황용석 외(2014)	정보생산 능력, 네트워킹 능력, 다문화 수용성의 3가지 구성개념으로 타문화에 개방적·수용적 태도를 가지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제작에 능숙하고, 온라인에서 제작된 콘텐츠나 정보를 확산, 공유, 협업의 네트워킹에 적극적인 것
Searson(2015)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관한 것
Searson, Hancock, Soheheil & Shepherd (2015)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행동하는데 필요한 품질
ISTE(2016) Ribble(2011, 2015)	온라인 환경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실천하는 것
UNESCO (2015, 2016a, 2016b)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 및 콘텐츠에 활발하고, 중요하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온라인과 ICT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역량
최문선, 박형준(2016)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비판적 관점,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

EU(2017)	디지털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창조 기술을 활용하며,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통해 인권 및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참여의 형태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Choi 외(2017)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 네트워크 주체, 인터넷 정치참여, 비판적 관점 등 5가지 요인을 가지는 종합적인 개념
박기범(2018)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합리성, 실천성, 도덕성을 맥락적으로 부여받는 시민성
UNESCO (2017, 2019)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 디지털 시민이 탐색하고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임영식, 정경은(2019)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지니는 것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품질(qualities)
김아미 외(2019)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사회 참여라는 행동으로 발현되며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지식·정보 융합의 인지적 영역과, 성찰과 책임 및 존중과 조화의 정의적 영역이 뒷받침된 개념
김양은 회(2019)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일,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전반

#### 4) 유사 개념

##### 가.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2006년 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갖추어야 할 8가지 핵심 역량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을 언급한다. 디지털 역량이란 'ICT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비판적·창의적으로 사용하며, 그 결과 직업(진로), 학습, 여가, 포용 그리고 사회참여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Ala-Mutka, 2011). 즉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디지털 역량은 직업, 학습, 여가, 사회참여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제조건인 ICT 관련 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아미 외, 2019).

고등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JISC에서는 디지털 능력(digital capability)이라는 용어로 디지털 역량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디지털 능력은 1) ICT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2) 정보, 데이터, 미디어 리터러시, 3) 디지털 학습과 개발, 4) 디지털 창작, 문제해결, 혁신, 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협력, 참여, 6) 디지털 정체성과 웰빙 등으로 구성된다(JISC, 2019).

#### 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information literacy; MIL)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유네스코에서 주창한 개념으로, 기존에 분리하여 논의되었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결합한 개념이다. 이전의 문해력이 인쇄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문해력이 필요한 대상이 영상, 디지털 정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미디어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인터넷 등을 꼽고 있다(UNESCO, 2014).

유네스코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Grizzle, 2018).

- 정보를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공유하는 역량

- 온라인상 권리에 대한 지식
- 온라인상의 혐오발언과 사이버 불링 대처법에 대한 이해
- 정보의 접근과 사용을 둘러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이해
- 미디어와 ICT를 활용하여 평등, 표현의 자유, 상호문화적·상호종교적 대화, 평화 등을 증진

미국의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연합(NAMLE)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정현선 외(2015)의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와 관련된 비판적 생산, 소비, 공유 능력뿐만 아니라, 감상과 향유 등 심미적 능력, 의미 이해와 전달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및 콘텐츠를 접하고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된 학습자의 복합적 역량으로 설명된다. 노은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및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탐색·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분석하며, 생산적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적인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다.

김아미 외(2019)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디지털 역량이나 ICT 활용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으로, 기술 중

심의 접근이다 보니 정보 수집·접근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한계가 있다(김아미, 2018).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출발점으로 삼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들은 인터넷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사용자가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그 안에서 사용자와 사회, 테크놀로지가 상호 구성적으로 만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라. 윤리적, 규범적 차원의 시민성(civility)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문제적인 소통 성향을 디지털 반시민성(DCI : digital communication incivility)라고 한다. 디지털 시민성이 권리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시민성(incivility)을 윤리, 규범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반시민성(incivility)은 직장, 학교에서 모욕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으로 규정돼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반시민성은 어떤 토론 공간에서 참여자를 향해 불필요하게 무례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댓글을 쓰는 것, 무례하게 비판을 하는 것,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Ruiz et al. 2011, Antoci et al. 2016).



DCI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반규범적이고, 상대 혹은 집단에게 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적 표현 및 소통 성향(Coe, Kenski, & Rain, 2014)으로 혐오 표현, 악성 댓글, 허위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 반시민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반시민성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학술적,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이 크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개념의 구조화와 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해왔고, 그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은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정립과 척도 개발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가 되는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현상의 출현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 분석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마. 유사 개념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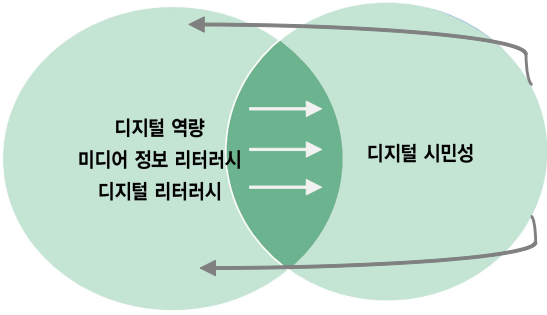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유사개념 중 역량과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방점을 두면서 그 개념이 발달하였고, 윤리적, 규범적 차원에 방점을 둔 시빌리티(civility)는 익명성을 전제로 발달된 디지털 사회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반시민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들 유사개념과 디지털 시민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술 활용 능력에 방점을 둔 디지털 역량,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개념은 디지털 시민성과의 교집합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엄밀한 차원에서는 이들 개념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필요성을 출현시키고 있는 토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사이버 세상이 출현하게 되었고,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할 기본 자질인 디지털 시민성의 정립 필요성으로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적 차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시빌리티(civility) 개념은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질 반시민성을 경계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표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시민성(incivility) 개념은 디지털 시민성 개념과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7> 디지털 시민성과 유사개념 간의 관계

유사개념	유사개념의 강조점	디지털 시민성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역량</li> <li>•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li> <li>• 디지털 리터러시</li> </ul>	기술에 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시민성 (incivility)</li> </ul>	윤리에 방점	

## 5)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구성요소는 <표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8>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

연구자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
Ribble & Bailey(2004)	예절, 의사소통, 교육, 접속, 거래, 책임, 권리, 안전, 보안(자기 보호)
안정임 외(2013)	참여성, 관용성, 공공성
박기범 (2014)	상위 속성(합리성, 도덕성, 실천성), 하위 속성(역량)
황용석 외 (2014)	콘텐츠 제작, 네트워킹 능력, 다문화 수용성
Ribble(2015)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커머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법, 디지털 권리와 책임, 디지털 건강, 디지털 안전(자기 보호)
최문선, 박형준 (2016)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비판적 관점,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
ISTE(2016) Ribble(2015)	접근,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에티켓, 법, 권리와 책임, 건강과 웰니스, 보안
Choi 외 (2017)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 네트워킹 주체, 인터넷 정치 참여, 비판적 관점
정제영(2018a) 한유경(2018) UNESCO (2017, 2019)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안전 및 회복력, 디지털 참여, 디지털 정서지능, 디지털 창의성 및 혁신
김아미 외 (2019)	인지적 영역 :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지식정보융합 정의적 영역 : 성찰과 책임, 존중과 조화 행동적 영역 : 디지털 사회 참여, 변혁적 행동
김양은 외 (2019)	정체성, 웰빙, 권리와 책임, 소통과 관계, 정보 리터러시, 사회 참여

임영식 외 (2019)	디지털 에티켓, 감정인지, 안전과 보안,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저작권, 공감, 온라인 정체성, 사이버 폭력 대처
임영식 외 (2022)	감정 및 공감, 사이버폭력,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김양은 외(2019)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즉, 현실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균형감을 유지하고, 디지털 세계를 개인이 주도하고 선택하며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민주, 세계, 평화 등을 제안한 것에 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추가되는 시민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정체성, 웰빙, 권리와 책임, 소통과 관계, 정보 리터러시, 사회 참여 등 6가지를 디지털 시민교육의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은 임영식 외(2019, 2022)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9년 연구에서는 감정 및 공감, 사이버폭력,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등 8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2022년 연구에서는 감정 및 공감, 사이버폭력,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등 7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각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 및 공감’에서는 ① 오프라인(현실) 및 온라인 세상 속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 인지, ②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 즉,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 또는 조절법에 대해 고민하며, 올바른 감정표현 및 이해로 원활한 소통 증진 ③ 온·오프라인에서 함양해야 할 가치인 ‘공감’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다루고 있다.

‘사이버폭력’에서는 ①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종류 인지, ② 사이버폭력을 당했

을 때의 대처 기술 습득(분명한 거부 의사, 도움 요청 방법 인지 등), ③ 사이버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하는 역할의 중요성 인지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 에티켓’에서는 ① 온라인에서도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긍정적 상호 작용을 통한 관계 맺기, ② 디지털 세상에서 가져야 할 에티켓(존중, 배려, 공감 등) 인지를 다루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① 스피싱,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코드 감염, 스팸, 위치정보 노출과 같은 온라인의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② 인터넷 세상에서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관리법 습득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에서는 인터넷(온라인 매체, SNS 등)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저작권’에서는 ① 인터넷 공간에서 취득한 다양한 정보와 저작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기, ② 올바른 저작물 공유 방법에 대한 개념 습득을 다루고 있다.

‘온라인 정체성’에서는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통해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다른 모습의 이점 혹은 위험에 대한 개념 확립 및 이해, ② 온라인에서의 유명세나 평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서의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체성 함양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내용을 포함하는 자질과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굳이 시대적 특징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금의 사회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변화된 온라인 중심의 사회적 기반에 대해 그 어느 세대보다 익숙해 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의 경우 가치관과 행위양식 모두 디지털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세대로 규정되기도 한다.

기존 세대들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식 방식에 익숙해 있는 세대라고 한다면, 이들 세대는 철저히 온라인 중심 세계의 작동 논리에 익숙한 세대로서 인류 역사에 있어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으로 규정되어도 무리가 없다.

이전 세대는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행위규범에 집중하면 되었지만, 이들 디지털 원주민 세대는 기존의 행위규범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행위규범 또한 고려해야 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한편, 근현대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시민성 개념이 왕권에 반하여 이루어진 합리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한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자유주의적 전통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인본주의와 연계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 왔고 그 결과 시민권과 시민성 개념으로 연계되어 온 반면, 오늘날의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온라인 기반 가상세계에서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가치와 행위양식의 의미로 제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전 세대들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은 시민성 개념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디지털 세대의 그것은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 시민성 개념에 의해 법적 차원에서 시민권 개념이 정립된 것처럼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의해 디지털 시민권의 법적 정의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세상의 도래와 본격적인 디지털 세대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세상에서의 행위양식은 명확한 규정 없이 참여자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디지털 세상의 행위기준을 기존의 오프라인 행위기준이 강제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두 축 간의 간격이 증가하고, 디지털 세상의 행위 기준은 더욱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과 시민성 개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민성과 시민권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가치들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고찰을 종합해 보면 오프라인 시민성 개념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핵심 요소 간에는 최소한 형식적 차원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시민성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가 자유와 책임이라면, 디지털 시민성 개념 또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모두 타인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과 더불어, 각 개인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라는 가치는 공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토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온라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반의 급격한 변동과 그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다음 <표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시민성과 비교해 볼 때 자유의 확장, 참여와 소통, 공유의 확대, 디지털 공간에 대한 활용능력 등과 더불어 자격조건과 의무 또는 책임의 축소 등과 같은 특징을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성 개념이 오프라인 현실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자격조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현된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서 요구되고 있는 참여자의 자질을 말한다.

<표9> 디지털 시민성 개념과 특징

용 어	정 의	특 징
시민성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자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lt; 책임</li> <li>- 공동체 또는 공동체 기반의 개인 강조</li> <li>- 공동체에 대한 소속 조건과 자격기준 등이 중요</li> </ul>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네트워크 공간에서 요구되는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gt; 책임</li> <li>- 틀 지워진 공동체보다 개인의 능력, 권리, 자유 등에 대한 강조</li> <li>- 자유를 강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 조건, 자격기준 등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음</li> <li>- 소통, 활용력, 참여, 공유 가치 강조</li> <li>- 디지털 역량 중요</li> </ul>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와같이 구성할 경우 디지털 시민성 개념 속에는 오프라인 시민성 개념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조건은 불필요

한 요소가 된다. 특정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규정한 구성원의 자격조건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세상은 자유로운 출입, 즉 가입 및 탈퇴가 자연스러운 곳이며,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보다는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의 소유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민성의 바람직한 모습은 특정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 자격조건, 책임과 의무, 공동체 의식 등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시민성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민성 개념이 절대권력으로부터의 압박과 통제에 기인하여 반대급부로 제기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의 시대인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 <표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공동체 의식의 감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일방향적 소통 증가,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손쉬운 확산, 정체성 혼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구속 정도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을 강조하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방향적 소통이 증가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 범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

〈표10〉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제점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제점	내 용
개인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	디지털 공간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남
공동체 의식의 감소	공동체 소속감이 약화됨에 따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식, 의무감 등도 감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개인주의적 행위양식과 비대면적 상황에서의 관계가 보편화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현상 발생
일방향적 소통 증가	본인 중심의 일방향적 소통 유형이 쌍방향적 소통보다 증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고 따라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가 빈번히, 무의식적으로 발생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손쉬운 확산	온라인 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 미비로 인해 부정확한 판단 증가, 잘못된 정보의 손쉬운 공유
정체성 혼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체성 간의 구분에 의해 다중 정체성이 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 정체성 혼란으로 연결됨

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부재로 인해 부정확한 판단과 해석이 일반화 되기도 하며,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 놓고 있는 다양한 아바타(가상적 대리인 또는 아이디)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게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정체성 간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시민성 개념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절대 권력을 법에 근거한 합리적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인식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체 기반 위에서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된 집단의 경계를 명확히 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디지털 공간 내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공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안 도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공간의 특징과 제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자질을 제안하면 <표11>과 같다.

<표11> 디지털 시민성 자질

디지털 공간의 특징	디지털 공간의 문제점	디지털 시민성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li> <li>- 소통</li> <li>- 활용능력</li> <li>- 참여</li> <li>-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보다는 자유</li> <li>- 공동체 의식 약화</li> <li>- 공감능력 감소</li> <li>- 일방향적 소통</li> <li>- 타인의 권리 침해</li> <li>- 부정확한 정보, 지식의 손쉬운 확산</li> <li>- 정체성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지는 자유</li> <li>- 공감력</li> <li>- 소통기술</li> <li>- 존중감</li> <li>- 디지털 리터러시와 올바른 활용능력, 분별력</li> <li>- 정체성 조화(개인과 공동체, 오프라인과 온라인)</li> </ul>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의 자질은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책임보다는 자유가 강조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공동체 의식과 공감 능력이 약하고, 일방향적 소통, 부정확한 정보의 범람, 정체성 혼란 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구축을 위한 자질 요소인 것이다. 책임지는 자유, 존중감, 소통기술, 디지털 리터러시와 올바른 활용능력 및 분별력, 공감력, 공동체와 개인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정체성 조화 등의 자질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편화된다면 앞서 살펴본 제반 문제점들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디지털 공간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토대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 4

## 기존 척도에 대한 적용

푸른나무재단은 2015년 카카오의 후원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카카오임팩트(카카오 사회공헌재단)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원주민으로 태어난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디지털 핵심 인성을 갖추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영역을 ①감정 및 공감, ②사이버폭력, ③디지털 에티켓, ④개인정보 보호, ⑤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 ⑥저작권, ⑦온라인 정체성 등 7가지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각 영역별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12〉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7대 주제

주 제	내 용
감정 및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현실) 및 온라인 세상 속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 인지</li> <li>■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 즉,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 또는 조절법에 대해 고민하며, 올바른 감정표현 및 이해로 원활한 소통 증진</li> <li>■ 온·오프라인에서 함양해야 할 가치인 ‘공감’에 대한 이해 및 적용</li> </ul>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종류 인지</li> <li>■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기술 습득(분명한 거부 의사, 도움 요청 방법 인지 등)</li> <li>■ 사이버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하는 역할의 중요성 인지</li> </ul>
디지털 에티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에서도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맺기</li> <li>■ 디지털 세상에서 가져야 할 에티켓(존중, 배려, 공감 등) 인지</li> </ul>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미싱,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코드 감염, 스팸, 위치정보 노출과 같은 온라인의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li> <li>인터넷 세상에서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관리법 습득</li> </ul>
디지털 리터러시 (분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온라인 매체, SNS 등)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li> </ul>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공간에서 취득한 다양한 정보와 저작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기</li> <li>올바른 저작물 공유 방법에 대한 개념 습득</li> </ul>
온라인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통해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다른 모습의 이점 혹은 위험에 대한 개념 확립 및 이해</li> <li>온라인에서의 유명세나 평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서의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체성 함양</li> </ul>

출처: 임영식 외(2022)

임영식이 개발한 이상의 7개 척도 영역의 핵심 가치를 축출하여 재구조화하면 <표13>과 같다. 감정 및 공감은 공감, 소통, 이해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폭력 대처 기술, 예방으로, 디지털 에티켓은 공감, 존중, 배려로, 개인정보보호는 디지털 활용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는 정보 분별력, 활용능력으로, 저작권은 존중, 활용능력으로, 온라인 정체성은 정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13> 임영식 7대 척도 재구조화

척도	핵심가치
감정 및 공감	공감, 소통, 이해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대처 기술, 예방
디지털 에티켓	공감, 존중, 배려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활용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분별력, 활용능력
저작권	존중, 활용능력
온라인 정체성	정체성

임영식의 7대 척도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6 가지 디지털 시민성 자질을 비교해 보면, 임영식 척도에서는 자유, 책임, 공동체와 개인 간 정체성 조화 등이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근본적인 사회 가치의 문제이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포함된다. 공동체와 개인 간 정체성 조화 역시 사회 속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본질적 행위 및 가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성 확립을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임영식 척도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들 부분을 포함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영식 척도에서는 척도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들이 상호 중복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시민성 자질별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척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영식의 척도에서 담고 있는 가치로는 사이버폭력 대처 및 예방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의 차용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척도를 자유, 존중감, 소통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력, 정체성, 문제 대처 능력 등 7가지로 정리, 제안하고자 한다.

‘자유’ 척도는 온라인 상에서 허용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와 책임 사이, 자신의 그것과 타인의 그것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존중감’은 타인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정도, 즉 타인의 가치도 자신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표14〉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척도 조정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척도
자유
존중감
소통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력
정체성
문제 대처 능력

‘소통기술’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 협의와 합의 등 의사소통 전반의 수준을 의미하며,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의 방식을 통해 얼마나 잘 이를 해결해 나가는가와 관계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상의 기본 원리와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디지털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들에 대한 탐색, 이해, 평가, 활용력 등 모두를 포괄하는 척도다.

‘공감력’ 척도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 의도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말하며, ‘정체성’ 척도는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개인이 현실 공간에서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의 집단 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간의 조화 및 구분 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이 느끼고 추구하는 정체성 간의 조화 정도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대처 능력’은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 취하게 되는 이해, 대처 및 예방 능력 등을 말한다.



시민성 개념은 국가 또는 공동체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으로 시대에 따른 공동체 특성의 변화에 맞춰 시민성 개념도 변화해 왔다. 근대국가 설립 이후 국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시민성은 세계 시민성으로 확대되고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디지털 시민성으로 확대·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성과 같지만, 각각의 공동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시민성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종단적 고찰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횡단적 연구는 문헌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조작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오프라인 시민성 개념과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핵심 요소 간에는 최소한 형식적 차원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시민성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가 자유와 책임이라면, 디지털 시민성 개념 또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핵심이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모두 타인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과 더불어 각 개인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라는 가치는 공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토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반의 급격한 변동과 그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시민성과 비교해 볼 때 자유의 확장, 참여와 소통, 공유의 확대, 디지털 공간에 대한 활용 능력 등과 더불어 자격 조건과 의무 또는 책임의 축소 등과 같은 특징을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자유주의적 전통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인본주의와 연계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 왔고 그 결과 시민권과 시민성 개념으로 연계되어 온 것과 달리, 오늘날의 디지털 시민성 개념은 온라인 기반 가상세계에서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가치와 행위양식의 의미로 제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보다는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의 소유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된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일치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영역을 ①감정 및 공감, ②사이버폭력, ③디지털 에티켓, ④개인정보 보호, ⑤디지털 리터러시(분별력), ⑥저작권, ⑦온라인 정체성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 척도에 대해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보완된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7가지의 핵심 가치 영역을 대입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의 자질 척도를 ①자유, ②존중감, ③소통기술, ④디지털 리터러시, ⑤공감력, ⑥정체성, ⑦문제 대처 능력 등 7가지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존 연구들과 더불어 디지털 공간의 변화무쌍한 현황에 대해 폭넓은 고찰을 시행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공간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연구가 지향하고자 했던 시대적 함의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 대한 재모색과 기존 척도에 대한 보완적 제언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그 목적 지점이 척도에 대한 제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척도들을 현장 속에 투여하여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 척도의 경우,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판단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척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또한 이해력과 분별적 판단력 및 활용능력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척도 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공간의 특성 역시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변화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에 맞춰 척도의 지속적인 보완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같은 부분은 본 연구가 메타버스, AI 등 최근 급격히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민성 개념과 관련 척도를 새롭게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한 적절한 적용을 통해 보완

을 지속해야만 그 유의미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이중적 의미의 지점을 말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명원(2021). 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5(4), 37-55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 교육부(2018). 2015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세종: 교육부
- 금수봉 외(2022).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금희조 외(202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시민성.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만권(2014). 디지털 시민권과 시민정치의 활성화. *문화와 정치*, 1(2), 67-93.
- 김만권(2020).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시민과세계*, 2022년 상반기호(통권 40호). 167-199.
- 김법연, 권현영, 김미량(2021).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3).
- 김봉섭, 김현철, 박선아, 임상수(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에 대한 탐색. KERIS.
- 김병곤(2007). 토머스 홉스: 동의에 의한 절대주의. 강정인 · 김용민 · 황태연 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 서울: 책세상
- 김아미, 이지영, 주주자, 이윤주, 양소은(2019).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양은, 배은주, 박정원(2018). 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시대 시민되기-학생용.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양은, 배은주, 박정원(2018). 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시대 시민되기-교사용.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영민, 허성호, 이려화(2022).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율성과 경직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4).
- 김영현(2021).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사회과 교육적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9호.
- 김윤정(2022).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디지털 의사소통 연구: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 화법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 김은미·양소은(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연구, 57(1), 305-334.
- 김현진 외(2021). 뉴 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은희, 신호재, 이재진, 정현선(2018).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경미 외(2018).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세미나 자료집.
- 박기범(2014).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탐색. 한국초등교육, 25(4), 33-46.
- 박기범(2019).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시민의 자질. 사회과교육, 58(4).
- 박상훈(2020).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8(2), 111-119.
- 박성우, 장지순(2021). 미디어 교육의 딜레마와 방향성 검토: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 신진욱(2008). 시민. 서울: 책세상
- 윤성혜(201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디지털 시민교육(digital citizenship education)의 필요성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11(3), 35-62.
- 안정임, 최진호(2020).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 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7호.
- 윤상균(2015). 과학기술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 탐구
- 이기정(2018). '시민사회'의 개념적 다의성이 갖는 의미: 홉스, 로크, 루소. 의정

- 논총, 12(2), 201-204
- 이동수(2017). 시민학과 시민교육. 인간사랑
- 이서윤(2020).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토플파이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17). 사회과교육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21-39.
- 이진석(2018).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디지털 시민성: 제6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73집, 65-82.
- 인천대학 인문학연구소 엮음(2021). 팬데믹 이후의 시민권을 상상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 임영식, 정경은(2019).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
- 임영식, 정경은(2020).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효과성 및 만족도 현장 연구. 푸른나무재단.
- 주선미(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171-183.
- 전정화, 권현영, 김미량(2021).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 방안: 자유학년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 탐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3).
- 정제영(2019). 디지털 혁명시대,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 행복한교육, 2019년5월호
- 전주희, 이종현, 문화, 정우준, 박임당(2018). 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리바이어던에서 시민권까지. 서울: 나뭇잎스
- 철학문화연구소 엮음(2022). 시대의 물음에 답하다
- 최문선, 박형준(2015).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형 디지털 시민성 척도 타당화 연구. 시민교육연구, 47(4), 273-297.

- 최지혜, 이영선, 정소영(2022).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8(5), 175-199.
-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탐색.
- 허수미(2010).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7(4), 183-198.
- Bart van Steenberger, 시민성의 조건. 협신사, 2004.
- Brynjolfsson, Erik and Andrew McAfee (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이한음 옮김. 제2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 Ducci, Francesco (2020). *Natural Monopolies in Digital Platform Mark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rari, A.(2013). DIGCOMP: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understanding digital competence in Europe. Edited by Yves Punie and Barbara N. Brečko. Seville: JRC-IPTS.
- Myers, J.P., To benefit the world by whatever means possible: adolescents’ constructed meanings for global citizenship.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3). pp.483-502, 2010.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nsky, Marc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 UNESCO (2015). *Fostering digital citizenship through safe and responsible use of ICT: A review of current status in Asia and the Pacific as of*



december 2014. Bangkok: UNESCO Bangkok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126

UNESCO (2016a). Assessment of transversal competencies: policy and practice in the Asia-Pacific Region. Bangkok: UNESCO Bangkok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UNESCO (2016b). A policy review: Building digital citizenship in Asia-Pacific through safe, effective and responsible use of ICT. Bangkok: UNESCO Bangkok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UNESCO (2017). Conference on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pacific outcome document. Bangkok: UNESCO Bangkok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UNESCO (2019). Digital Kids Asia-Pacific: Insights into Children's Digital Citizenship. Bangkok: UNESCO Bangkok Asia-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 기사

디지털 시민역량의 필요성. 대학신문. 22.3.1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237>

‘디지털 시민성 교육’…디지털 사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길. 노컷뉴스. 21.4.9

<https://www.nocutnews.co.kr/news/5533007>

[해외리포트] 유럽연합·미국·영국 디지털 교육 발전 전략 20.12.14

<https://arte365.kr/?p=83747>

코로나19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시민성 키운다. 한겨레. 20.8.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588.html>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시민성' 20.7.6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1>

경기도교육연구원 "디지털 세대에게 '디지털 시민성' 교육 필요" 20.3.3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15>

디지털 혁명시대,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 2019.5/ 행복한 교육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52&nttId=9197](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52&nttId=919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2019.9/ 행복한 교육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bbsId=BBSMSTR\\_000000000191&nttId=9444](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bbsId=BBSMSTR_000000000191&nttId=9444)

## 홈페이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자료실

<https://ainse.kr/front/digital/digitalcitizenList.do>

<https://www.commonsense.org>

##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합의 연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행인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발행처 푸른나무재단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최원기(티랩)
- 공동연구원 : 노명순(고려대학교)
- 공동연구원 : 조민식(서정대학교)

검토진

-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 박주한 푸른나무재단 본부장
- 조성훈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과장
- 서지현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팀장
- 문승찬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담당
- 최연수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담당
- 김태희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담당